

21-05 2021.06.28

현안과 과제

■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 설문조사

■ 개 요

최근 경기선행지수와 경제심리지수가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국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2021년 한국 경제 전망도 3.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최근 국내 경기 회복세가 반영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 및 연구소, 금융기관 등 11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과 정부 정책 방향 및 과제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

(경제 전망) 국내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시기는 2021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4%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2021년 한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시기를 묻는 질문에 '2021년 하반기(34.5%)'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음'이라는 응답도 29.2%로 높은 비중을 보여 연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4%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49.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반등'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꼽았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2021년 하반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반등(31.1%)', '소비심리 회복(26.7%)', '코로나19 영향 탈피(21.8%)' 등을 꼽았다. 2021년 하반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25.3%)', '원자재가격 상승(20.8%)' 등이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정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정부 예산 절감'이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가계부채 증가'가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미·중 갈등 등 주변 강대국 간 역학구도(16.4%)', '잠재성장률 하락(15.0%)', '고령화(13.7%)' 등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환율·통화정책 전망)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예상 시점은 '2022년 상반기'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전문가 집단별로 전망 시점에 차이를 보였다. 미국이 경기 회복, 물

가 상승 등에 따라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현행 0.25%인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2022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다. 다만 기업 및 연구소, 기타 집단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2022년 상반기'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금융기관 집단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2023년 이후'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전문가 집단별로 미국 금리 인상 전망 시점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준금리는 현 수준(0.5%)이 적절하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2022년 상반기'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0.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6.6%로 과반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은행의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2022년 상반기'일 것이라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22년 하반기' 전망이 27.4%로 높아 전문가 대부분이 2022년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전망) 2021년 하반기 서울 주택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1년 하반기 서울 주택가격은 '2.5% 미만 상승(36.6%)'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높았으며, '현재 수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33.0%로 높아 보합 또는 소폭 상승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7.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규택지 공급(20.4%)',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15.9%)', '공공·임대주택 확대(11.5%)' 순으로 높아 공급 및 규제 완화 응답 비중이 높았다.

(기업 활동 전망) 전문가들은 2021년 하반기 산업계 주목 키워드로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를 꼽았다. 2021년 하반기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을 키워드는 무엇인냐고 묻는 질문에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를 응답한 비중이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금리 인상(22.2%)', '미·중 갈등(12.9%)', '4차 산업혁명(10.2%)' 등의 응답이 높았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전략은 '신성장사업 진출'을, 향후 5년간 우선 육성해야 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와 'IT융합'이라고 응답하였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신성장사업 진출'이라는 응답이 63.7%로 과반 이상의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감한 투자'가 22.1%로 높았다. 또한 향후 5년간 우선 육성해야 할 신성장동력 산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IT 융합' 산업이 각각 29.2%, 28.3%로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전기차’ 산업이 19.5%, ‘바이오’ 산업이 16.8%로 높은 응답 비중을 기록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기업 규제 중 가장 시급히 완화가 필요한 규제로는 ‘사업이나 요금 관련 인허가 규제’가 62.8%로 과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정책 평가)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잘한 경제 정책은 ‘복지 확대’, 가장 미흡한 정책은 ‘부동산정책’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남은 임기 중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 ‘규제 개혁’ 등이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잘한 경제 정책으로 ‘복지 확대’라고 응답한 비중이 3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가장 잘한 정책이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도 28.8%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 지난 4년 동안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부동산정책’이라는 응답이 61.3%로 과반 이상의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중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22.1%)’, ‘규제 개혁(19.4%)’, ‘경제(내수)활성화(17.1%)’,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관리(16.7%)’,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대책(13.5%)’ 등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

(차기 대선 이슈)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로 ‘국가운영능력’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20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묻는 질문에 ‘국가운영능력(24.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미래 비전(21.2%)’, ‘사회통합능력(19.8%)’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이슈는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현 정부에서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 부동산정책이 꼽힌 만큼 20대 대선에서는 ‘부동산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한 비중이 33.8%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회불공정개선(20.9%)’,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16.9%)’, ‘경기 회복(14.7%)’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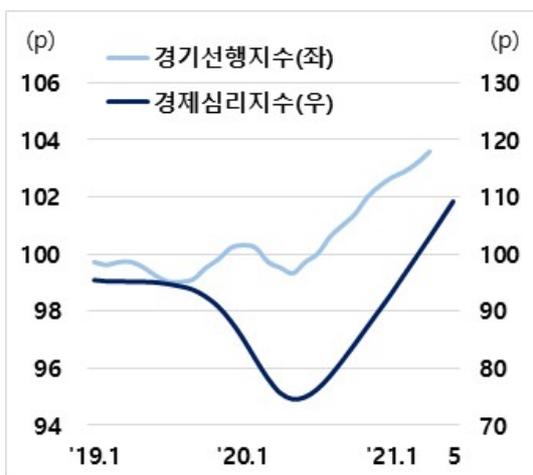
첫째,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향후 경기 회복 및 하방 리스크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경기 회복세를 더 강화하고 경기 악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ESG 경영, 신산업 발굴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 흐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1. 개요

○ 최근 국내 경기는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설문조사를 통해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 및 정부 정책 방향 등을 판단

- 경기선행지수와 경제심리지수가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고조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2020년 5월 저점(99.3p)에서 2021년 4월(103.6p)까지 회복세를 지속함
 - 소비자동향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 순환변동치도 2020년 5월 저점(74.6p)에서 2021년 6월(109.3p)로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함
 - 국내외 주요기관의 2021년 한국 경제 전망도 3.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최근 국내 경기 회복세를 반영함
-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과 정부 정책 방향 및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함
 - 기업 및 연구소, 금융기관 등 11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경기선행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



자료 : 통계청.
주 : 순환변동치 기준.

< 국내외 주요기관 한국 경제 전망 > (%)

	2021년	2022년
한국은행	4.0	3.0
IMF	3.6	2.8
OECD	3.8	2.8
World bank	3.5	3.1
ADB	3.5	3.1
글로벌 IB 평균	3.9	3.0
현대경제연구원	3.5	-

자료 : 각 기관 자료.

2.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

1)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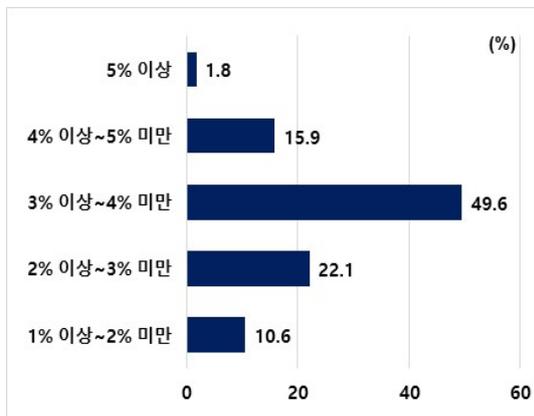
○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회복 시기는 2021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4% 수준일 것으로 전망

- 한국 경제 회복 시기 : 국내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2021년 한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시기는 '2021년 하반기(34.5%)'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
 -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음'이라는 응답도 29.2%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2022년 상반기'가 20.4%로 높은 응답을 기록함
 -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이후'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각각 14.2%, 1.8%에 그침
- 경제성장률 전망 : 2021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4%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3%이상~4%미만'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9.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함
 - 다음으로는 '2%이상~3%미만'이 22.1%로 높았으며, '4%이상~5%미만'은 15.9%, '1%이상~2%미만'은 10.6%를 차지함
 - '5%이상'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1.8%에 불과했음

< 한국 경제 회복 시기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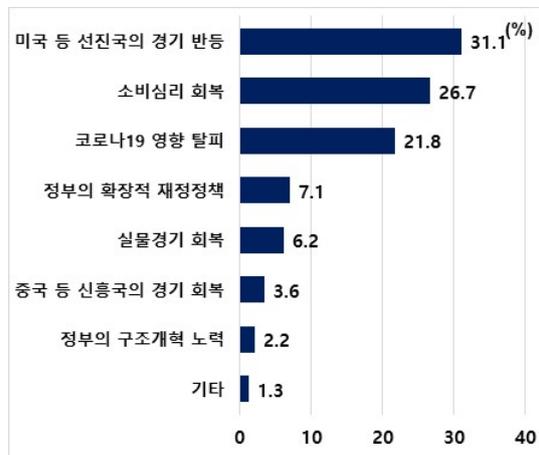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 2021년 하반기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반등'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꼽음

- 2021년 하반기 경제에 긍정적 요인 : 전문가들은 2021년 하반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반등'과 '소비심리 회복', '코로나19 영향 탈피' 등을 꼽았음
 -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반등'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았으며, '소비심리 회복'과 '코로나19 영향 탈피'도 각각 26.7%, 21.8%로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 그 외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7.1%)', '실물경기 회복(6.2%)',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회복(3.6%)',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2.2%)' 순임
 - 기타 의견으로는 '지속적 수출 증가'가 하반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이라는 응답이 있었음
- 2021년 하반기 경제에 부정적 요인 : 2021년 하반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높은 비중을 보임
 - 전문가들이 꼽은 국내 경제의 부정적 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2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20.8%)'이 높았으며, '금리 인상(16.7%)', '정부부채 증가(15.8%)', '코로나19 장기화(15.4%)' 순으로 높았음
 - '소비심리 부진'이라는 응답은 4.5%에 그쳤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미중 갈등'이라는 응답이 있었음

<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 >



<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 >



○ 정부 지출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정부 예산 절감'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가장 많이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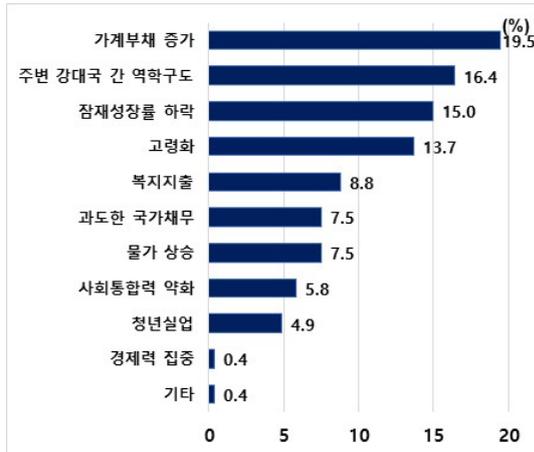
- 추가 재원 조달 방식 : 코로나19 이후 각종 정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정부 예산 절감'이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
 - '정부 예산 절감(50.8%)' 다음으로는 '탈세 예방(18.8%)', '세금 인상(13.4%)', '부자 증세(10.7%)' 순으로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 기타 의견으로는 '예산 사용 효율성 증가(성장 산업 투자 확대 등)', '국채 발행' 등의 의견이 있었음

- 향후 경제 위협 요인 :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가계부채 증가'가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계부채 증가' 외에도 '미·중 갈등 등 주변 강대국 간 역학구도(16.4%)', '잠재성장률 하락(15.0%)', '고령화(13.7%)' 등이 높은 응답을 보임
 - 그 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지출(8.8%)', '과도한 국가채무(7.5%)', '물가 상승(7.5%)', '사회통합력 약화(5.8%)', '청년실업(4.9%)'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저출산, 인구 감소'가 있었음

< 추가 재원 조달 방식 >



< 향후 경제 위협 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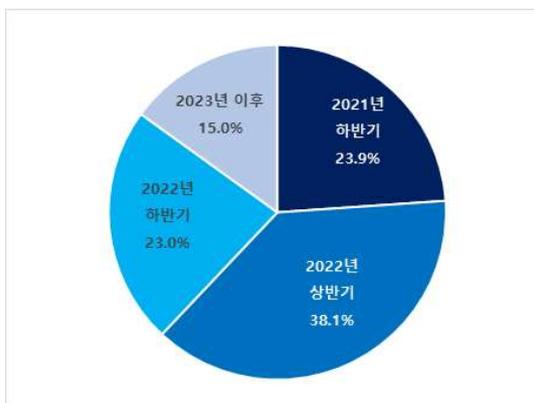


2) 환율/통화정책 전망

○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예상 시점은 '2022년 상반기'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전문가 집단별로 상이한 전망을 보임

-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그 시기는 '2022년 상반기'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미국이 경기 회복,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현행 0.25%인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2022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음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2021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도 각각 23.9%, 23.0%로 높았음
 - '2023년 이후'일 것이라는 응답은 15.0%에 불과하여 적어도 2022년 이내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전문가 집단별 인상 시기 예상 : 다만 기업 및 경제 전문가 집단별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예상 시기가 다르게 나타남
 - 기업 및 연구소, 기타 집단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2022년 상반기'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그러나 금융기관 집단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2023년 이후'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22년 하반기'를 꼽아 다른 집단에 비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멀리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금리 인상 시기 >



< 전문가 집단별 미국 금리 인상 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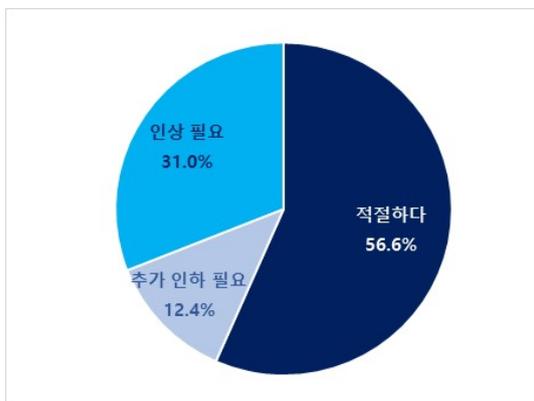


○ 한국 기준금리는 현 수준(0.5%)이 적절하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2022년 상반기'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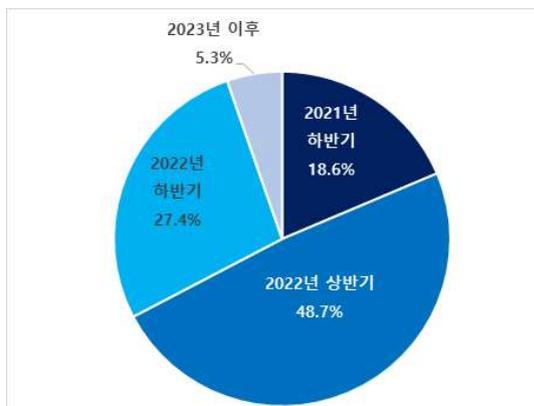
- 한국 기준금리 수준 : 현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적절하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현재 0.50%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6.6%로 과반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
 - 그 다음으로는 '물가,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하면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31.0%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도 높았음
 - '경기 둔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하면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2.4%에 불과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기 : 한국은행의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2022년 상반기'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2022년 상반기'일 것이라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2022년 하반기' 전망이 27.4%로 높아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비중이 우세
 - '2021년 하반기'를 예상하는 응답 비중도 18.6%로 연내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비중도 높았으며, '2023년 이후'는 5.3%에 불과

<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 >



< 한국 금리 인상 시기 >



3) 부동산 시장 전망

○ 2021년 하반기 서울 주택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 2021년 하반기 서울 주택가격 전망 : 2021년 하반기 서울 주택가격은 '2.5% 미만 상승(36.6%)'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높았음

· 하반기 서울 주택가격은 '2.5% 미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현재 수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각각 36.6%와 33.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음

· '2.5~5%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14.3%로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2.5~5% 하락'은 6.3%, '2.5% 미만 하락'과 '5% 이상 상승'이 4.5%, '5% 이상 하락'은 0.9%에 그쳐 하락보다는 상승 전망이 우세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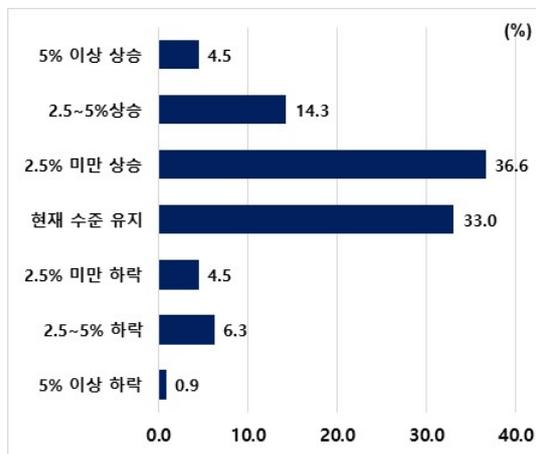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7.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음

· 그 다음으로는 '신규택지 공급(20.4%)',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15.9%)', '공공·임대주택 확대(11.5%)' 순으로 높아 공급 및 규제 완화 응답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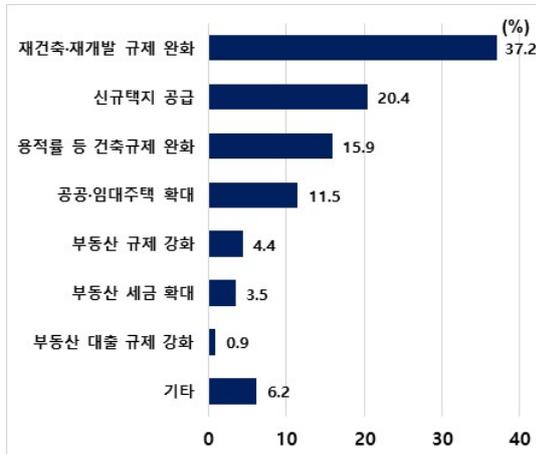
· '부동산 규제 강화(4.4%)', '부동산 세금 확대(3.5%)',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0.9%)' 등 규제 강화 응답은 낮았음

· 기타 의견으로는 '부동산 세제 개편', '금리 인상' 등을 응답

< 하반기 서울 주택가격 전망 >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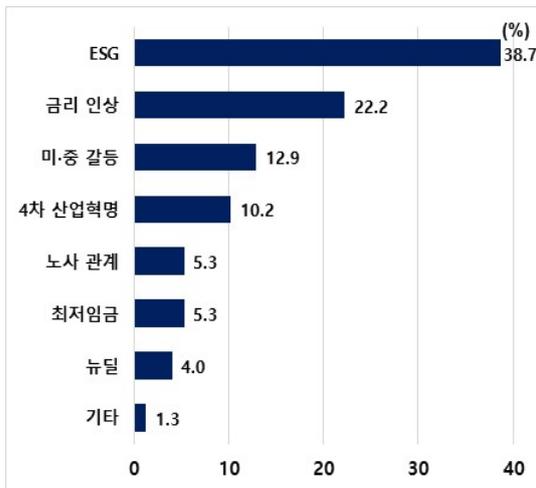


4) 기업 활동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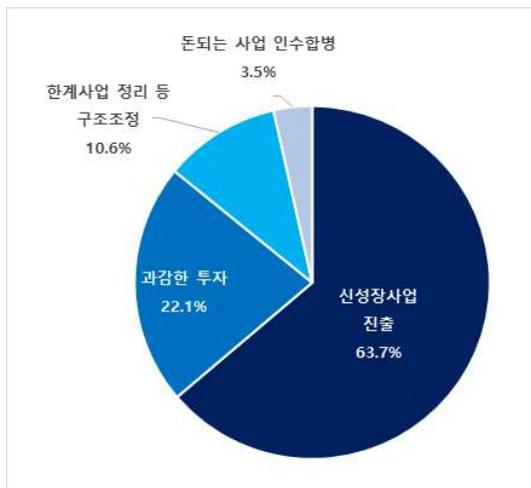
○ 2021년 하반기 산업계 주목 키워드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가 가장 높았으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전략은 '신성장사업 진출'임

- 하반기 산업계 주목 키워드 : 2021년 하반기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을 키워드는 무엇이나고 묻는 질문에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2021년 하반기 산업계 주목 키워드로 'ESG'를 응답한 비중이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금리 인상(22.2%)', '미·중 갈등(12.9%)', '4차 산업혁명(10.2%)', '노사 관계(5.3%)', '최저임금(5.3%)', '뉴딜(4.0%)' 순이었음
- 기업 중점 전략 :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신성장사업 진출'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신성장사업 진출'이 63.7%로 과반 이상의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감한 투자'가 22.1%로 높았음
 - '한계사업 정리 등 구조조정'은 10.6%, '돈되는 사업 인수합병'은 응답 비중이 3.5%에 그침

< 하반기 산업계 주목 키워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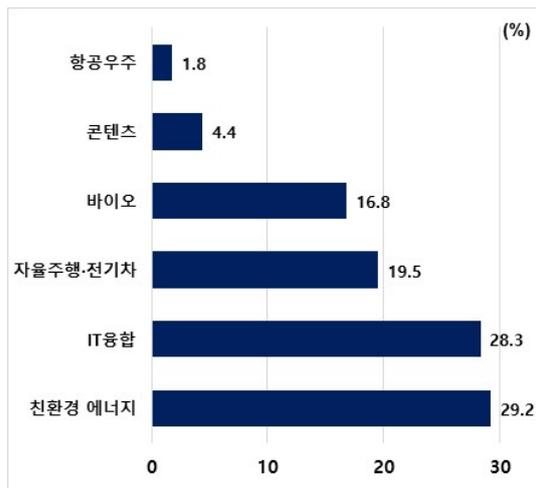
< 기업 중점 전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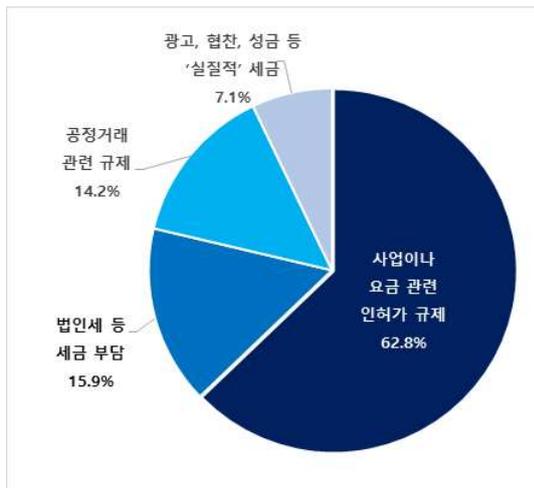
○ 향후 5년간 우선 육성해야 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와 'IT 융합'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부분은 '사업 및 요금 관련 인허가 규제'라는 응답이 우세

- 신성장동력 산업 : 향후 5년간 우선 육성해야 할 신성장동력 산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IT 융합' 산업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IT 융합' 산업이 각각 29.2%, 28.3%로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전기차' 산업이 19.5%, '바이오' 산업이 16.8%로 높은 응답 비중을 기록
 - '콘텐츠' 산업과 '항공우주' 산업 응답 비중은 각각 4.4%, 1.8%에 그침
- 완화가 필요한 기업 규제 :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기업 규제 중 가장 시급히 완화가 필요한 규제로는 '사업이나 요금 관련 인허가 규제'가 62.8%로 과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
 - '사업이나 요금 관련 인허가 규제' 다음으로는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이 15.9%,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14.2%를 차지하였으며, '광고, 협찬, 성금 등 실질적 세금' 응답 비중은 7.1%에 그침

< 신성장동력 산업 >



< 완화가 필요한 기업 규제 >



5) 정부 정책 평가

○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잘한 경제 정책은 '복지 확대', 가장 미흡한 정책은 '부동산정책'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남은 임기 중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 '규제 개혁' 등이 높게 나타남

- 가장 잘한 정책 :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가장 잘한 경제 정책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복지 확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잘한 경제 정책으로 '복지 확대'라고 응답한 비중이 3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는 '신산업육성(18.9%)', '사회양극화완화(4.5%)', '각종 규제혁신(3.6%)', '최저임금인상(3.6%)', '일자리 창출(2.7%)', '재벌 개혁(1.8%)' 순이었음
 - 가장 잘한 정책이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도 28.8%에 달함
- 가장 미흡한 정책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 지난 4년 동안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부동산정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미흡했던 정책이 '부동산정책'이라는 응답이 61.3%로 과반 이상의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음
 - 다음으로는 '사회양극화완화(12.6%)', '각종 규제혁신(9.9%)', '일자리 창출(6.3%)', '신산업육성(3.6%)', '재벌 개혁(2.7%)', '최저임금인상(0.9%)' 순이었음
- 남은 임기 중 추진 정책 :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중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 규제 개혁, 내수 활성화 등 다양한 응답을 보임
 - 정부가 남은 임기중 추진 해야할 정책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22.1%)', '규제 개혁(19.4%)', '경제(내수)활성화(17.1%)',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관리(16.7%)',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대책(13.5%)'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가장 잘한 경제정책 >



< 미흡한 경제정책 >



< 남은 임기중 추진 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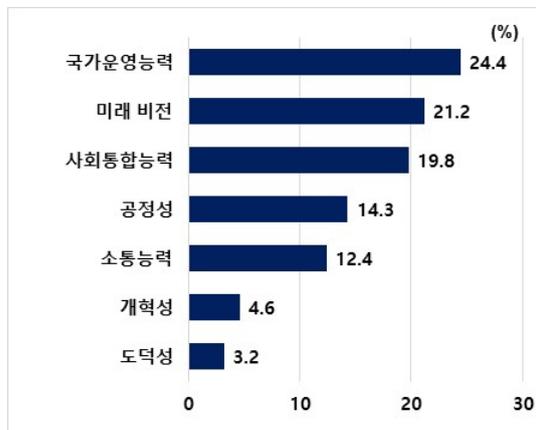


6) 차기 대선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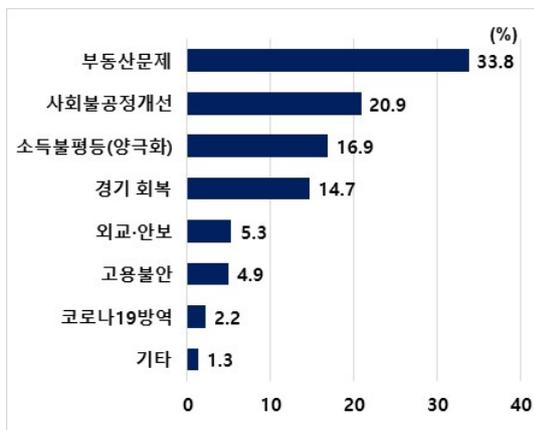
○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로 '국가운영능력'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20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 :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국가운영능력'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로 '국가운영능력(24.4%)', '미래 비전(21.2%)', '사회통합능력(19.8%)'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반면 '공정성(14.3%)', '소통능력(12.4%)', '개혁성(4.6%)', '도덕성(3.2%)' 등은 낮은 비중을 차지함
- 20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 20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이슈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부동산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 현 정부에서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 부동산정책이 꼽힌 만큼 20대 대선에서는 '부동산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한 비중이 33.8%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사회불공정개선(20.9%)',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16.9%)', '경기 회복(14.7%)'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반면 '외교 및 안보(5.3%)', '고용불안(4.9%)', '코로나19 방역(2.2%)'은 낮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 의견으로 '청년 이슈', '사회통합', '출산율 문제' 등이 있었음

<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 >



< 20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



3. 시사점

첫째,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 각종 변이 바이러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함
- 경제 회복세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단기적 경기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경제 성장 기반 확충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함
- 향후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는 시점에 국내 경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로드맵을 구축해야 함

둘째, 향후 경기 회복 및 하방 리스크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경기 회복세를 더 강화하고 경기 악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 글로벌 경기 반등, 소비 심리 회복, 코로나19 영향 탈피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향후 국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함
- 다만 가계부채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정부부채 증가 등 국내 경제의 부정적 요인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
- 특히 향후 경제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 가계 부채 증가, 주변 강대국 간 역학 구도,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

셋째,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하여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

들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 부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또한 미국 등 기축통화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정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함
-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 예산 효율화, 재정 준칙 마련 등을 필요함

넷째, ESG 경영, 신산업 발굴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 흐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산업계 주요 키워드가 될 ESG 경영에 기업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함
- 기업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한 신규 투자 및 M&A에 정부가 세제 혜택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에너지, IT 융합, 자율주행·전기차 등 민간 부문의 수요에 적합한 국가 R&D 사업 전략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HRI**

신유란 선임연구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
오준범 연구위원 (2072-6247, jboh19@hri.co.kr)
홍유림 연구위원 (2072-6243, ylhong@hri.co.kr)